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서봉교 ·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2012년 4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I. 서론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즈음한 2020년을 겨냥하여 “균형되고 조화로운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왔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성공의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12년 등장할 5세대 지도부는 이전과 달리 개혁 후기의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이념적 취약성, 부정부패로 인한 정통성의 위기,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에너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 지속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3월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서 확정된 ‘12.5 계획’(規劃)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가 구체적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내 정치경제적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2012년과 2013에 걸쳐 진행될 5세대 정치엘리트로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5세대 정치엘리트는 이전 세대와는 체제 속성과 정책성향에서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지?

둘째, 중국이 향후 10년에도 서구식 정치개혁을 유보한 채 소위 “중국식 정치개혁”, “중국식 발전방식”을 통해 정치안정과 체제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서구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지난 30년간 “정치개혁 없는 성장”이 지속된 것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은 이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셋째, ‘12.5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민생활 개선”과 “사회건설 강화”를 통해 지난 30여 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사회 양극화, 부정부패, 실업 등 불안정 문제를 해결 또는 관리하면서 균형 성장을 실현해 갈 수 있을지?

중국 체제의 지속과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성장신화에 묻혀 있던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는 상당부분 경제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체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정치 엘리트들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 정치엘리트 역시 합의를 통한 정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권력정치의 안정성과 균형성장은 상호 유기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중국 공산당체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II. 5세대 정치엘리트의 등장과 특징

1. 5세대 정치엘리트 등장 전망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의 권력교체, 특히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의 권력이양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미 권력의 중심에 진입해 있는 5세대 리더십으로의 권력교체는 큰 변동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특유의 권력교체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9인 체제도 정착되고 있다. 16차 당 대회에서 7인에서 9인으로 증가하였고, 17차 당 대회에서도 9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시진핑(習近平)이 향후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와 2013년 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은 2002년 후진타오가 장쩌민을 승계하기 위해 밟아온 과정과 절차를 답습해가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10월 17차 당 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強)과 함께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데 이어서 2008년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며 5세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다.

17차 당 대회에서는 권력승계와 관련 이전과는 다른 실험을 했다. 기존의 1인 낙점, 지명 방식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2인 경쟁 구도로 변화한 것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체제까지는 개혁개방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고, 덩샤오핑에 의해 낙점된 후계체제였다. 새롭게 등장할 5세대 정치엘리트들은 계파간 타협의 결과 2인 경쟁구도로 귀결되고 있다. 향후 이들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성향을 지닌 2인이 총서기와 총리를 분담하는 투톱체제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이례적인 시도이다.

5세대의 2인 경쟁체제가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계파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계파간 대립보다는 협의와 타협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진핑의 개인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도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후진타오 체제보다도 더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의 성격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각각 책임영역을 분담하는 집단 지도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하지만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

리청(Li Cheng)은 중국공산당내의 ‘태자당’(太子黨)과 ‘상해파’ 중심의 ‘엘리트그룹’(The Elitist)과 ‘공청단’(共靑團)출신 중심의 ‘대중그룹’(The Populists)의 두 개 파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Li 2010). 사실 중국 정치엘리트내의 파벌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파벌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표면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도 파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9년간 정책적 이견이 일부 노정되었을 뿐 파벌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될 사례는 거의 없다.

요컨대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 인식이 크면 클수록 정치엘리트 내부의 단합과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 역시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내부의 안정화는 중국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분열은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한 후진타오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중국문제의 관건은 정치국,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태산과 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新華網 2007). 이는 결국 중국 체제의 안정성은 엘리트 정치에 달려 있고, 엘리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 승계이고, 권력승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안정은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권력 교체는 물론이고 정책적 이견으로 인한 내부 분열, 또는 갈등의 대외적 노출이 야기할 있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정치엘리트들간의 내부 단합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고,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이후 예정대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구축된다면 외견상 과거 어느 체제보다도 이질성이 강한 조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이 중국 부상의 성패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공통의 인식이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 공멸의 위기 공감대와 함께 공생의 기대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민생’ 이었고,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키워드 역시 민생 이었던 것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5세대 엘리트 역시 민생 정치를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현재 공산당이 직면한 시대적 요구와 위기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 공감대가 엘리트의 단결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5세대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정책 방향

중국 정치엘리트의 성격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체질 변화와 연동되어 진행되어왔기에 향후 중국의 정치변화를 전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산당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던 혁명당에서 개혁기에는 개혁을 통해 발전을 추동하는 행정당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정치정당으로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과도기적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鄭永年 2007, 32-41). 장쩌민 시기에 이른바 “삼개대표론”을 공식 지도사상으로 당장(黨章)에 새로이 포함시킨 것 자체가 바로 공산당이 기존의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그리고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변신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당의 체질 변화와 함께 공산당 지배엘리트의 성격 또한 변화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혁명가들이 지배엘리트였다면 덩샤오핑 시기와 장쩌민 시기에는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이 지배엘리트로 충원되었다. 정치정당으로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위치한 후진타오 시기를 거쳐 새로이 등장하는 5세대의 정치엘리트들은 기존의 이공계통의 교육 배경을 지닌 기술관료와는 달리 인문사회계열의 교육을 받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치가와 사회 관리자들로 충원되고 있다.

5세대 엘리트들은 대체로 건국 후 출생하여 10대에 문혁을 경험했고, 20대인 70년대 초중반, 즉 문혁 후기,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격동기에 공산당에 입당했다. 개혁개방과정을 통해 주로 지방정치무대에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2007년(17대)에 정치국원으로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한 엘리트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¹. 아울러 4세대가 기술 관료라고 한다면 이들은 주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행정관료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². 5세대 지도부는 대체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안정을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국 이후 출생하여 문혁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소위 “잃어 버린 세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견간부 시절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경험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방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공통의 경험으로 인해 단합과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당내 분열은 결국 당 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 공감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개혁개방 이후의 엘리트 그룹으로서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강한 자신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5세대 정치엘리트의 등장은 10년만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우선, 비록 기존과 같은 전임자의 낙점 방식이 아닌 경쟁 방식을 통한 권력이양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권력계승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권력 계승에서 여전히 전임자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최고위 권력자인 특정개인이나 국민보다는 권력의 위임주체인 당 지도부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5세대 지도부는 상당기간 후진타오, 원자바오(溫家寶), 쑹칭홍(曾慶紅) 등 4세대 지도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 기조 역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2012년 이후 일정기간 후진타오, 원자바오와 같은 전임 정치엘리트의 영향력이 일정 정도 지속되면서, 새로운 5세대 정치엘리트와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후진타오는 총서기 취임전 10년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활동했고, 장쩌민은 13년간이나 총서기에 재임했던 것과 비교하면 5세대 지도부는 권력기반을 강화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시진핑, 리커창 그 누구도 권력 엘리트 내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질것이다.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권력 엘리트 내부의 타협과 협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17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 체제의 전반기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12차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국가발전계획이 5세대 지도부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4세대의 주도하에 수립 결정되었다. 이 역시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에도 최소한 전반기는 4세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인 동시에 4세대와 5세대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국가 정책의 큰 줄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진핑은 후진타오와는 계파가 상이하고 정책 성향도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청단 계열, 대중그룹으로 분류되는 후진타오와 리커창은 과학발전관을 주창하면서 정치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분배 정의와 사회 균형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개발,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 안정망 수립,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외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대미 의존성을 줄여가면서 독자적 경제대국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태자당계열, 또는 엘리트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진핑은 연해지역 출신으로서 정치 발전과 민주화보다는 경제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에 적극적이다. 주로 기업가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내부적으로 당면한 시대적 요청과 과제를 고려한다면 대중그룹의 정책방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에서 내수확대로 방향전환을 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국내에서 창출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외의존적 경제성장에 따른 취약성을 줄여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³. 아울러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으로도 이해된다.



실제로 17기 5중전회에서 확정된 ‘12차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에서는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으로 ‘민부’(民富)와 ‘포용적 성장’(包容性增長)을 제시하였다. 이는 균형발전을 통해 개혁개방 과정에서 야기된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전체 중국 인민이 함께 향유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5세대 지도부의 등장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후진타오 체제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기존 보다는 좀 더 균형에 치중하는 정책 방향을 지향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성장 기조를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회복되면 성장드라이브 정책도 지속해 가야 한다. 요컨대 계파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균형, 내수와 수출 어느 한 마리의 토끼만을 쫓을 수는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5세대 정치엘리트 등장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개인 또는 소수에의 권력 집중이 약화되는 반면에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 지형의 다양화를 반증해주는 동시에 이전과 달리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이해집단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증대하고 있고 행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용과 조정을 위한 정치 제도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증폭시킬 개연성이 높다.

비록 계파간 심각한 갈등을 노정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정책결정과정이 지체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반도 정책 등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실제 정책실행과정에서도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 차이를 조정, 중재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외부에 정책이 표출될 때는 최대한 합의된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집권할 5세대 정치 엘리트는 중국 권력지형의 변천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혁명세대, 개혁세대에 이어서 포스트 개혁세대의 등장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덩샤오핑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는 개혁세대는 사실상 고도성장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면 포스트 개혁세대는 성장모델의 전환과 정치개혁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세대 엘리트들이 집권 기반이 취약한 전반기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느냐가 향후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정치개혁과 체제의 안정성 전망

1.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전망

중국은 여전히 일당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반면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치지도자들



은 중국이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실정(國情)에 적합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중국의 민주정치건설〉, 2007년 〈중국의 정당제도〉, 2008년 〈중국의 법치건설〉⁴, 그리고 17차 당대회(2007)에서의 후주석의 정치보고 등을 통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 건설을 위해 공산당 영도, 인민의 정치주인화(當家作主),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중국정치의 기본 제도인 인민대표대회,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 기층자치제도를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공히 중국은 결코 서구식 의회제, 다당제, 삼권분립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최근 중국 정치 엘리트 사이에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3월 제11기 전인대 제4차 회의 기간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 사이에 정치 개혁에 대한 상이한 입장 표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 원총리는 폐막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0년 8월 이후 수 차례 제기한바 있는 정치개혁 문제를 재차 거론하였다. 원총리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제기했다. 즉 당과 국가의 활력유지, 경제개혁의 성취, 부패문제 해결, 공평과 정의의 실현, 인민의 적극성 고취 등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원총리는 경제체제 개혁이 성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진적인 과정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人民網 2011). 반면에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하여 다당제, 다원화, 삼권분립과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吳邦國 2011).

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하면 우위원장은 정치개혁 추진에 있어서 대전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원총리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원총리가 공산당 영도하의 점진적 개혁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우위원장이 주장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두 사람 사이에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은 반대하며, 공산당 체제의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언론이 공개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국 국민의 78퍼센트가 정치개혁을 원하지만 서구식 민주정치의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15.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環球時報〉 2011/3/15). 아울러 중국 학계에서도 이전과 달리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큰 틀에서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민주를 둘러싼 논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소위 자유사회주의, 자문형 법치국가, 민주사회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何增科 2008; 李君如 2007; 조영남 2009). 요컨대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 유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진행하여 당의 통치능력을 강화시켜가고자 하는 것이다(이정남 2011).

중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일정은 중국의 발전전략 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공산당학교(中央黨校)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개혁 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2040년경에 가서야 중등 발전 정도의 민주적 정치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周天勇·王長江·王安嶺 2007, 45-50).

중국은 향후 10여 년 여전히 지금과 같이 소위 중국식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의 내용은 정치제도화와 당내민주화라는 두 축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인대라 불리는 입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 그리고 법치화(의법치국)를 추구해가는 것이다(조영남 2011, 19-22). 즉, 중국 정치지도자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외부의 기대와 달리 서구식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내민주화, 제도화, 법치화로 대변되는 중국의 정치개혁은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강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즉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공산당이 여전히 개혁을 주도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통치행위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국 정치, 사회의 안정 여부는 상당부분 공산당의 집권 능력에 달려 있다. 즉 공산당 집권세력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사회불안정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제도화를 통한 통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형시켜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권능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공산당 엘리트간의 단합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2. 중국정치 체제의 안정성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성장과정에 다양한 성공의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 부정부패, 환경오염과 에너지 수급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성 위기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장쩌민 체제 후반기부터 이미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만을 가지고 체제의 정당성(performance-based 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다. 장쩌민 집권말기에 ‘삼개대표론’을 당장에 포함시킨 것은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초래된 계층분화라는 변화에 대한 현실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화된 사회계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소위 “친민정치”(親民政治)를 내세워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서구식 정치민주화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5세대 정치엘리트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일원적 정치체제와 다원적 사회의 이중구조라는 불안정된 상태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지난 30년의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각종 형태의 사회단체가 출현하고 개인권리 의식 또한 크게 신장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용하는 정치체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 있다.

경험적 정치학 연구들은 중국도 민주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5천 달러 이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드물고, 8천 달러 이상에서는 비민주국가가 드물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서구식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주화는 결국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에 의해 추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당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며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회 불만과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내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어야 한다.

우선 중국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세력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산계층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민주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38퍼센트인 도시화는 2020년까지 58퍼센트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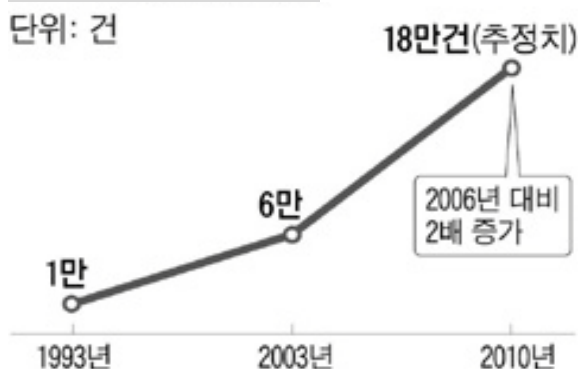


고, 50퍼센트 정도인 농업노동력의 비중은 30퍼센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陆学艺 2003, 1-9). 중국의 사회단체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국가에 대해 이전에 비해 일정한 자주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1965년 중국의 사회단체는 전국적인 수준의 단체가 100개, 지방성 단체가 6,000개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7년 말 민정부(民政部)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수는 21만 2천 개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가 5억 명에 육박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각종 단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산계층과 사회단체의 급속한 증가는 그 자체로 중국의 정치·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과 사회단체가 실제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의 사회단체가 여전히 정부로부터 충분히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당과 국가가 정한 한계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한 사회세력의 활동이 오히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⁵.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탄압으로 조직적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활동 이외에 다수에 의한 활동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청원서를 내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개는 몇몇 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이다(김영진 2011, 105-106).

그리고 중국에서 집단 시위는 공식통계로도 18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림1]에서 보듯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조선일보〉 2011/08/17). 지난 10년간 10배 정도의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 후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 중국 사회의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시위는 정부 혹은 개발 업자들의 무단 또는 불공정 토지 점용, 지방 간부의 권한 남용, 기업의 임금 체납 등과 관련이 있다. 사실상 정치운동이기 보다는 민생문제이고 권리보호(維權)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농민공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운동이 빈번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중시위가 향후 10여 년 내에 체제위협 요소로 발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림 1] 중국 시위 발생 증가



최근 집단 시위에 대응하는 중국 공산당의 대응 방식은 세련되고 유연해지고 있다. 2011년 9월 광둥성 우칸(烏坎)촌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 시위가 협상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 관리가 마을 공동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불법 매각하고 거액의 이득을 챙긴 사건에 반발해 시작된 농민 시위가 4개월간 지속되었다. 결국 5세대 정치엘리트로 주목 받고 있는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는 강경진압이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고, 협상 이후 자치 선거를 통해 시위 주도자들이 촌장 등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중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과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중국



기층 단위에서 ‘우칸촌 효과’가 확산될 것인지는 향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은 중국 지도부의 신속한 사태 해결을 통한 체제 안정 의지가 표출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중국 정부가 시위세력에 밀려 원치 않는 협상을 최후 선택했다기 보다는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이 강경진압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2011년 5월 내몽고에서의 집단 시위 역시 공권력 동원과 더불어 시위대와의 협상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여 사태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였다. 현재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중시위는 분명히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통치 엘리트에게 일정한 위협이 되겠지만, 이 시위들이 체제개혁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아직은 대중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시켜낼 조직화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조직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지식인 등 중산계층이 체제에 흡수되고 있고, 체제 수호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식인과 기업가들이 중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중추세력인 동시에 기득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과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련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소련의 충격요법(shock therapy)식 정치개혁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쉽게 설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공산당 통치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공산당 역시 이념적 재해석 등을 통해 지식인들과 기업가를 포용하면서 공산당, 지식인, 그리고 기업가들과의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치해 가고 있다.

공산당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은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대로 공산당내 파벌간 갈등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부 절충을 통해 단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농민이 아닌 지식인과 사영 기업가와 같은 중산층과 엘리트층을 지배체제에 흡수하는 포섭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권력, 지식, 자본의 공고한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과정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통치능력을 강화하고 통치행위를 규범화, 제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산적한 국내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극적인 세계화 참여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지위와 영향력을 크게 신장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G2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성취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공산당 통치 정당성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일련의 중요한 도전, 예컨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쓰촨 대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위기관리와 극복 능력을 보여 주면서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주요한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국민적 기대를 증폭시켜 가고 있다. 즉 중국 내부의 위기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비교할 때 중국 공산당의 내부 지지도는 안정적이다.

중국사회에는 집단시위도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부상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중화민족주의 역시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중국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중국의 미래에 대한 중국인의 기대와 자부심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중국인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한 경우가 44.7퍼센트로 한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23퍼센트)와 비교할 때 두 배에 달하고 있다(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연구소 2011).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리더 국가가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하는 비율이 60.7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중국정부의 도광양회 정책노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중국 부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



한 국민적 정서로 인해 외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위기론이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한껏 고양된 기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화민족주의에 의존한 체제 정당성 확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날을 가진 민족주의의 속성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3. 소결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려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향후 10년 내에 공산당에 도전하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 형성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중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당과 정부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대중 시위가 확산되어 중동 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저항 운동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현재 중국 사회의 대표적인 불만세력이자 잠재적 저항세력인 노동자와 농민들을 정치화하고 조직화하여 민주화 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지식인과 기업가들은 이미 지난 30년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현 공산당체제의 주요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화하여 공산당 통치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다. 중국의 기업가는 이른바 붉은 자본가(red capitalists)라고 불릴 정도로 공산당과 긴밀한 연계 속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 또는 관료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일종의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개혁은 개혁의 주 대상인 공산당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앞으로 상당기간 공산당의 주도하에 매우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중단기적으로 중국 정치사회에 급격한 변화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앞으로도 탄력적 권위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취약한 안정(fragile stability)이라는 독특한 상황을 상당기간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중국은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행정적 효율성, 대외정책상의 성과, 그리고 중화민족주의 고양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러한 점진적 개혁이 현재 중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도 높다. 비록 중국의 현 체제에 근본적 위협이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소요와 불안정은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치 민주화 문제 역시 공산당의 단합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계속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역시 언젠가 해결되어야 하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지는 부담을 계속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IV. 성장모델의 전환과 안정적 성장

중국이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개혁 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연평균 10퍼센트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2010년에는 GDP 규모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수출규모도 2009년부터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외환보유액은 2006년 이래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3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다.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러한 성장 추세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미국경제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⁶.

하지만 이러한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성장속도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경우 고속성장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폭발적인 돌발변수로 등장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일자리의 축소로 이어지고 실업증가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사회불안 요인 혹은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향후 급속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상당기간 지금과 같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른 정치적인 불안정성, 전세계적인 자원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이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1. 중국경제 성장 원동력과 환경변화

중국경제가 앞으로 수년 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성장속도가 급속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경제가 왜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경제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한 탁월한 지도력이나 점진주의적 이행전략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부터 인구 구조학적인 장점, 문화대혁명 등의 역사적인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 교수와 같이 중국의 성장을 중국 특색적인 측면보다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단 시간에 배울 수 있었다는 보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린이푸 2001).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토지나, 노동, 자본, 에너지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의한 것인지 총 요소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인지도 많은 연구 주제가 되었다(후안강 2011). 하지만 이와 같이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실을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되기는 힘들다.

오히려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중국의 성장원동력이 무엇이었던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에 최근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지, 혹은 최근의 어떤 환경변화가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논의를 진행하기에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타인펠트(Edward S. Steinfeld)는 중국의 성장은 중국 자체의 힘



으로만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 산업국가들의 기술과 제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중국의 독재정부 시스템은 향후 미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제도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제도의 불완전성이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능력의 부재(不在)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지 못한 중국의 성장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스타인펠트 2011). 비슷한 논리로 불량식품과 저가 제품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상품은 더 이상 도약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 자체의 브랜드가 없는 중국에게 경제대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조명진 2010). 이와 비슷한 논리로 중국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에 한계를 가진다는 주장은 최근 천즈우(陈志武) 교수도 하고 있다. 천즈우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후발주자의 이득을 누렸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후발주자로서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천즈우 2011). 그는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발전한 나라를 모방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개혁을 할 수 없는 “후발주자의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자체적인 성장 원동력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다양한 상반된 사례들 중에서 검증을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중국경제의 내재적인 성장원동력에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수년 내에 중국경제의 심각한 성장둔화로 이어질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여전히 산업구조나 기술력에서 선진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여전히 과거 한국 등 후발개도국의 90년대 이전 수준이다. 이들 후발개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10년 정도는 중국의 성장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지역별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지속될 여력도 존재한다.

반면 최근 중국경제 성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주장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세계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의 일련의 개혁들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Steinfeld 2011). 중국정부는 80년대 후반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었던 경제문제를 90년대 들면서 국제분업 시스템으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수출확대라는 형태로 풀어나갔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목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동반한 단일환율제도로의 개혁(1994년)이 단행되었고, 중국을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추진되었다.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 정부의 외자기업 지원정책 등은 중국을 단숨에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결과로 외국 투자자본의 중국유치(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도 빠르게 확대되었다⁸.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형성, 고용 확대, 제조 기술 도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다국적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 중국 노동자들은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중국경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점차 높아졌으며, 2000년대에는 20퍼센트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70년대 말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60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표 1]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의 요인별 구분

(단위: 퍼센트)

	경제성장률	소비 기여도	투자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2000	8.4	65.1	22.4	12.5
2002	9.1	43.9	48.5	7.6
2004	10.1	39.5	54.5	6.0
2005	10.4	37.9	39.0	23.1
2006	12.7	40.0	43.9	16.1
2007	14.2	39.2	42.7	18.1
2008	9.6	43.5	47.5	9.0
2009	9.2	45.4	95.2	-40.6
2010	10.3	36.8	54.0	9.2

자료: <중국통계연감>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원동력인 ‘해외 시장’이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는 지금과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9년에는 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40.6퍼센트로 급감하기도 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⁹.

중국이 향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90년대 이래 “글로벌 불균형”의 균형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해 대량의 달러를 확보하였다. 반면 미국은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고속성장을 유지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도 중국이 지금과 같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계속되었고, 중국정부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절상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수정은 불가피하였다¹⁰.

그렇다면 향후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해외 수요’의 감소로 인해 정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음 절에서는 중국정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내수 확대형 성장모델로의 전환과 소비의 중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해외 수요’의 감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중국 국내 수요’의 확대이다. 즉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내수 확대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내수에서 찾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12·5규획’(2011~2015)에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5규획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국민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확대와 격차해소라는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표 2] 12-5규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의 비교

	11-5 규획 ('06~'10)	12-5 규획
주요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GDP 2배 달성 효율적 생산 자원효율 20퍼센트 향상 개방형 경제 및 국제수지 균형 사회보장, 빈곤인구 감소 등 소득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물가안정, 거주 및 환경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확대에 따른 안정적 경제발전 경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민생개선: 소득개선, 사회보장, 노사관계개선 및 임금인상 경제발전 방식의 실질적 개선 종합 국력, 국가경쟁력 제고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 규획(계획 → 규획) 명칭변경: 계획경제적 색채 감소 균형발전 강조 경제발전 방식 변화 강조 속도보다 질을 중시 경제성장 → 경제발전(질적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을 더욱 강조 수출, 투자, 소비 → 소비, 투자, 수출로 우선순위 변경(소비 최우선) 소득분배의 순위가 상승 임금제고, 노사관계 안정 등 노사관계 관련 구체적 언급

자료: KIEP 북경사무소,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성장전망” 재인용

그러나 문제는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모델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확대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정부가 ‘12·5규획 건의’에서 향후 5년간 중국경제발전의 10대 임무에서 내수확대를 1순위로 제시한 것도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수 확대형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중국의 내수가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수(內需)는 국내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투자, 즉 자본형성을 위한 수요와 최종 소비를 위한 수요로 구분된다. 현재 중국 내수의 구조적 특징은 투자를 위한 수요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를 위한 수요 비중은 낮다. 2009년에는 전체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의 95.2퍼센트가 투자의 기여도이고, 2010년에도 54퍼센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상당부분 정부투자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¹⁾. 더구나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줄곧 40퍼센



트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상당히 높은 반면, 소비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3] 중국과 주요국의 GDP에서 소비, 투자 및 수출 비중(2009년)

(단위: 십억 달러, 퍼센트)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GDP	4985		833		5067		3330		14119	
소비	1762	35.4	453	54.3	3020	59.6	1962	58.9	10001	70.8
순수출	220	4.4	33	3.9	14	0.3	156	4.7	-386	-2.7
투자	2010	40.3	244	29.3	1046	20.6	596	17.9	2220	15.7

자료: Global Insight, SERI 경제포커스 330호 재인용

이는 향후 중국이 내수 확대형 경제성장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내수소비 확대의 어려움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결국 중국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중국의 민간소비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은 부자이지만 중국인들은 가난”¹²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수 소비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향후 중국은 지금과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간소비 확대를 제약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 십 년간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 집중되었고, 개인들의 실질 임금 상승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이다. GDP에서 노동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초 50퍼센트대에서 점차 낮아져서 2000년대에는 40퍼센트대로 감소하였다. 즉 소비로 전환될 수 있는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내수 확대는 힘들어지는 것이다(김태일 2011). 둘째,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하여 주택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각종 제도개혁의 결과로 주택가격 상승, 교육비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이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고, 저축을 확대하여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 넷째, 금융제도 및 신용정보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래소득을 담보로 소비를 하는 형태가 제약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심각한 소득불평등¹³은 사회적 부를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도록 하였고,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저소득층을 증가시켰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중국의 소비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향후 중국은 내수 소비형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중국의 내수는 충분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중국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에서 소비확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실질 소득향상을 통한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의 임금상승 억제정책에서 전환하여 최근 최저임금을 평균 20퍼센트 이상 대폭 인상하면서 민간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는 향후에도 임금상승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임금상승이 사회 전반의 전반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2011년 중국 주요 지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위안, 퍼센트)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산둥
최저임금액	960 → 1160 (20.8)	1120 → 1280 (14.3)	960 → 1140 (18.8)	1030 → 1300 (26.2)	920 → 1100 (19.6)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1.7.14) 최저임금기준률 인상안

둘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세제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다소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⁴.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¹⁵. 향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민간소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특히 통화공급과 잉여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할 때 다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05년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국유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사회보장기금 확대,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아직도 농촌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서유럽 국가나 일본과 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은 인구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연령의 비중이 높아져 재정위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구축되어가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크지 않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은퇴계층에 대해 짚어지는 재정부담에 비해 중국이 은퇴하는 농촌 1세대들에 지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전히 중국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수준¹⁶인 것도 향후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점진적인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대가 형성될 경우 소비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최근 중국의 금융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2006년부터 전 국민의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소비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소비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사들이 현금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은행의 개인 소매대출도 현재 전체 대출의 10퍼센트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향후 소매대출이 더욱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민간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출 확대가 금융사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 또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 중국 정부가 12-5규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소비확대를 위해 소득격차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면서 소득격차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시장보다는 국가의 조정을, 경쟁보다는 균형을 강조하는 신좌파의 이론이 주목 받고 있으며,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¹⁷. 경제발전의 충칭모델 논쟁도 대두되고 있다¹⁸. 이러한 시각에서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소득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와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상속세 도입 등의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소득격차 축소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낙관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중국이 추진해온 시장경제가 완전한 자유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형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의 소득격차 해소와는 부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격차 문제가 완화될 경우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이 중국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의 안정적인 전환과 내수,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는 대내적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대외변수의 안정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책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대외변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불안요인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V.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민간소비 여력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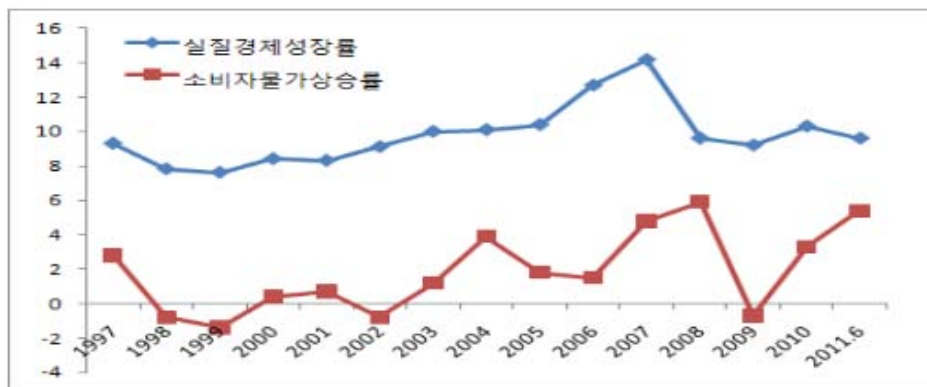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의 급감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이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소비의 확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방식으로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도 민간소비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부동산 가격 등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거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부실대출이 확대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중국이 비록 당분간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이 지속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대내외적 안정성 문제는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¹⁹.



1. 물가상승과 대외변수

최근 중국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1년에 들면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7월과 8월에는 6퍼센트대로 급상승하였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행히 전월의 6.5퍼센트보다 다소 낮은 6.2퍼센트로 꺾였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가의 급상승은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나아가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면 많은 중국인들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최근의 식품가격 폭등은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국가였다. 경제성장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거의 0퍼센트에 가깝게 낮게 유지되는 매우 안정적인 성장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더욱 크다.

[그림 2] 연도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자료: 중국 통계국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근의 중국 물가상승이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 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중국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물가상승은 기후나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변수²⁰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가 경기위축을 타계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에서도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2009년 33퍼센트, 2010년 20퍼센트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총통화(M2)도 각각 28퍼센트와 19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과 선진국에서 동시에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국내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점차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조만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실제로 다행히 2011년 11월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5퍼센트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남유럽 재정위기, 유로존 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의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위기 타파를 위해 중국이 긴축이 아니라 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국 등 선진국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통



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향후 다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향후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중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물가상승의 기대효과는 중국의 부동산이나 시장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어 악성 인플레이션 순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외변수의 불안정성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리스크 요인이 된다.

2. 위안화와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위안화 문제이다. 중국은 무역거래를 위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자유태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거래의 외환거래는 태환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절상을 기대하고 있는 국제 핫머니의 유입이나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이나 2010년 중국과 미국이 환율절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국제금융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기도 하였다²⁾. 이러한 국제자본의 이동은 때로는 중국 거시경제를 교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정상적인 투자수익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위안화 절상이 국제 금융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우려를 제기하여 위안화 절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금융자본의 중국 내 유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가 전세계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아울러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금융자본의 이동에 따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도 향후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수가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3.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의 심화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민간 소비확대를 위해 소매대출 확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확대, 은행 대출 확대 등 금융권의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다. 금융업의 발달이 미래 소득을 현재화하여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경제 둔화에 대비한 내수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2000년 이전 중국의 금융사들이 부실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대출 급증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빅터 시(Victor Shih) 교수는 중국의 8,000여 개 지방정부의 대출을 조사한 결과 중국정부의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까지 모두 포함하면 2011년 GDP의 96퍼센트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동하 2011). 중국의 지방정



부는 도시발전투자공사라는 것을 통해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는 거대한 부실도미노를 일으켜 중국경제에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4. 자원과 환경제약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자원과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제약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석유와 같은 원부자재나 곡물이나 사료 등의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중국 거시경제에 커다란 불안요인이다. 이러한 자원 가격 상승은 부존 자원의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도 있지만, 달러의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실물 자원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러한 자원의 가격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여 불안정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최근의 세계경제 불안정성이 향후 전 세계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자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나 자원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의 환경오염이나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강화 움직임도 중국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나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서구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무역에서 그린장벽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 배출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중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때문이다.

5.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문제는 대외변수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국경제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심각한 경기위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팽창이 이어지지 않는 한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정부의 통화 및 화폐 정책 조정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시장의 거품이 확대되고 이러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에도 중국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매우 리스크가 높았지만 현재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부실비율도 역대 가장 낮은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대한 대출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도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최근의 지방정부의 부실대출 확대는 지속적으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부 변수가 중국의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3조 달러의 세계 최대의 달러 외환보유고는 중국경제를 안정화 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 이자율 자유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자율을 상당부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국내 이자율을 교란하거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중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제약이나 환경의 제약, 국내 인구구조의 노령화, 기업의 자발적 혁신 시스템의 부재, 이외에도 많은 정치경제적 이슈들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 둔화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 방식에서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외변수의 불안정성도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 한국에의 함의와 정책 제언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위기요인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위기 요인들을 향후 10년 안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동시에 현 중국 당과 정부는 이러한 위기 요인들이 체제의 근본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와 과제들을 중국의 부상 실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부상은 중국 지도부에게 절대적 과제이며, 따라서 최소 향후 10년은 부상 일정을 진행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중국이 부상에 집중하는 향후 10년은 한국과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은 한국이 미중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과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해 가는가에 따라 미래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은 중국과 신뢰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시도를 해가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 가치 제고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 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에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대세로 만들어 감으로써 향후 중국의 개입여지와 영향력을 약화시켜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동원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특히 중국이 이미 “핵심이익”으로 공표한, 중국이 스스로 영토와 주권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5세대 정치 엘리트에게 상대적으로 외교적 융통성은 제한되며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서와 강경세력의 주장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국가관계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접촉면을 갖고 있는 한중관계에서도 이러한 중국이 설정한 핵심이익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국민들간의 민족주의 정서의 충돌 등 예상치 못한 대립 구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기 예방과 사후 위기관리 능력 및 체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앞서 분석한대로 단기간에 성장둔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성장방식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고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다. 언론에서 최근 중국경제의 물가상승이나 내수둔화의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 문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정착률은 비단 중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0년대 초반 한국무역의 대중 의존도는 9퍼센트대였으나 현재는 이미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둔화나 중국 수출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산 공산품이나 농산품의 수입가격 인상을 통해 한국의 생산자 물가 또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소비 및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임금상승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중 수입부문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따른 한국 내 물가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여 대중국 물류 시스템 개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 중국 이외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도 관세 인하에 따른 중국 상품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서비스산업 분야 등은 중국정부가 여전히 외국기업의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의 내수시장 진출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주(註) ---

¹ 지방 정치지도자의 중앙정치로의 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각각 지방 당서기로 2번 임기를 거쳤다. 중앙 정치국위원가운데 지방 당서기 출신이 14대의 10명(50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대에서는 19명(76퍼센트)으로 증가하였다.



- ² 5세대 정치엘리트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시진핑(청화대 법학), 리커창(북경대 경제학), 리위안차오(당교 법학), 류옌둥(길림대 법학) 4명에 이른다.
- ³ 실제로 지난 10년(1999-2009)을 ‘부상(崛起)의 10년’ 이었다면 향후 10년(2009-2019)은 ‘공평(公平)의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즉 지난 30년의 개혁개방의 성과 특히 지난 10년의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체제, 즉 안정적인 교육, 의료,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가 있다(中国战略网 2010).
- ⁴ 중국정부가 발표한 각 백서의 내용은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2007, 2008)참조.
- ⁵ 중국 당 국가체제는 1989년의 천안문 사건, 1991년 소련의 해체, 재스민 혁명 등 여러 차례 국내외의 위기를 통해 직간접 학습 효과를 통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은 80년대 중국 내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 89년 사태로 민주화 운동은 반체제 활동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단속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활동 공간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록 이후 1998년의 중국 민주당 창당 시도, 그리고 2008년 12월의 ‘08현장’ 사례 등 민주화 운동의 사례가 있었지만 일부 지식인들과 해외인사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 ⁶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가 기존에 예기되었던 2030년 이 아니라 향후 10년 내 즉, 2019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한석희 2011).
- ⁷ 중국정부는 당시 달러당 공식 위안화 환율을 5.76위안에서 8.62위안으로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공식환율과 실질환율의 이원화된 체제를 단일 환율체제로 통합하였고, 이후 10여 년간 달러당 8위안대의 사실상 달러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다.
- ⁸ 외국인 투자는 90년대 초반 매년 100~20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2010년에는 1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 ⁹ 2009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6.0퍼센트가 감소하였다.
- ¹⁰ 2010년 9월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위안화 환율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미국상원의 보복 관세 법안 상정이나 노동조합이 미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원 법안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민일보 등의 사설이나 고위 관료를 통해 강력하게 이를 비난하고 있다.
- ¹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투자지출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정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진피해 재건사업, 주택 건설, 농촌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투자가 82퍼센트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 ¹²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에서는 중국인들의 임금수준이 낮은 이유로 중국에 대한 유럽과 미국 기업의 착취를 지적하고 있다(랑셴핑 2011).
- ¹³ 중국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0년대 0.2로 매우 낮았으나 급격히 높아지면서 2011년에는 0.5로 높아져서 세계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 ¹⁴ 중국정부는 최근 상하이에서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하거나, 은행 및 비은행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¹⁵ 중국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할 때 토지판매 대금과 같은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토지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 ¹⁶ 중국의 재정적자는 공식적인 수치로는 GDP 대비 3퍼센트대이지만, 비공식적인 재정적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높은 10퍼센트까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 ¹⁷ 일부에서는 중국 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대표격인 장웨이잉의 퇴진을 신좌파의 등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좌파의 한사람인 왕휘는 “시장 숭배주의가 빈부격차·부정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를 낳았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우덕 2011).
- ¹⁸ 충칭에서는 지금 농민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그간 발전과정에서 소외됐던 농민들에게 의료·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정부의 정책이다. 그런가 하면 충칭의 일부 대학생들은 농촌 체험 활동에 나선다. 그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농촌으로 찾아가 노력 봉사를 하고 있다. 문혁시기 하방(下放, 지식인들의 농촌 노동 활동)을 연상케 한다. 요즘 중국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충칭 모델’의 현장이다(주장환 2011).
- ¹⁹ 중국경제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는 그 동안 풀렸던 과도한 경기부양 자금이 과잉투자를 불렀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를,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모두 경제에 부담으로 특히 과잉투자로 인한 디플레이는 향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2차 5개년 기간(2011~2015) 중 전반부는 성장을 하겠지만 후반부는 힘들 것으로 본 것이다(한우덕 2011).
- ²⁰ 물론 2011년의 물가상승률의 표면적인 이유는 돼지콜레라 파동을 거치면서 급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상승세와 부동산 가격,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얘기된다. 하지만 내재적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이 커지고 임금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바탕이 되고 있다.
- ²¹ 핫머니 유입 추정치가 2008년 1분기에는 250억 달러, 2010년 1분기에는 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수 2011).



참고문헌

- 김동하. 2011. 《위안화 경제학》. 서울: 한스미디어
- 김영진. 2011. “중국의 사회변동과 민주화 전망.”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이동률 편, 105-106.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태일. 2011. 《차이나 이팩트》. 서울: 이담북스
-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공동 여론조사 결과 2011년.
- 랑셴핑(郎咸平). 이지은 역. 2011.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서울: 미래의 창
- 린이푸(林毅夫). 한동훈 역. 2001.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 스타인펠트, 에드워드. 구계원 역. 2011.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서울: 글항아리.
- 이정남. 2011.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이동률 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진수. 2011. “햇머니 유출입에 따른 중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가능성.” *KDI Working Paper*
- 조명진. 2010. 《우리만 모르는 5년 후 한국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 조영남. 2011. “전국인대 11기4차 회의(정치): ‘전환,’ ‘민생,’ ‘법치’의 국정방침.” <동아시아브리프> 6, 2: 19-22.
- 주장환. 2011. “중국 국내 발전 모델 논쟁의 현황과 그 함의.” 중국전문가포럼(CSF). 9월 8일.
<http://csf.kiep.go.kr>
- 천즈우(陈志武). 박혜린·남영택 역. 2011. 《중국식 모델은 없다》. 서울: 메디치미디어
- 한석희. 2011.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CSF. 10월5일. <http://csf.kiep.go.kr>
- 한우덕. 2011. “Boom vs Doom.” <중국경제 콘서트(52)>
(http://blog.join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woodyhan&folder=1&list_id=12201766)
- 후안강(胡鞍鋼). 이은주 역. 2011. 《2020년 중국》. 서울: 21세기북스.
- <조선일보>. 2011. “빈부격차·물가폭... 中 시위 작년 18만 건.” 8월 1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7/2011081700123.html)
- Li, Cheng. 2010. “China’s Midterm Jockeying: Gearing Up for 2012((Part 1-3).”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1(February 15)
- 陆学艺. 2003. “当代中国社会阶层的分化与流动.” <社会学研究> 4, 1~9.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中国的民主政治建设”. 10월. http://www.gov.cn/zwgk/2005-10/19/content_79539.htm.
- 李君如. 2007. 《当代中国政治走向》. 福建人民出版社.
- 周天勇·王长江·王安岭. 2007. 《攻坚：中国政治体制改革研究报告》. 新疆生产建设兵团出版社.
- 鄭永年. 2007. “중국공산당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창립 기념 발표자료집, 32-41.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2007. “中国的政党制度”. 11月. http://www.gov.cn/zwgk/2007-11/15/content_806278.htm;
- 新華網. 2007. “为了党和国家兴旺发达长治久安：党的新一届中央领导机构产生纪实.” 10月24日.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1498.htm
- 何增科. 2008. 《中国政治體制改革研究》. 中央編譯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2008. “中国的法治建设”. 10月. http://www.gov.cn/zwgk/2008-02/28/content_904648.htm;
- 中国战略网. 2010. “中国应从‘崛起10年’渡向‘公平10年’.” 瞭望东方周刊 8月 28日. <http://observe.chinaiiss.com/html/20108/28/a29ca5.html>
- 環球時報. 2011. 3月15日.
- 人民网. 2011. “温家宝只有不断地改革 党和国家才充满生机活力.” 3月14日. <http://2011lianghui.people.com.cn/GB/214392/14137332.html>
- 吴邦国. 201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工作报告—2011年3月10日在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 3月10日. http://www.npc.gov.cn/wxzl/gongbao/2011-07/08/content_1665568.htm

필자약력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1996년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중국화 전략: 현황과 함의” 등이 있다.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중국경제, 중국금융 담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금융연구소 해외사업연구팀 수석연구원(중국금융 담당),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 경제 담당)을 역임하였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